"'야' 대신 '이름'을 불러 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안전 위해

'이름 없는 기계' 멸시·핍박의 호칭에 산업재해 노출도 '빈번'
전남노동자권익센터, 내년부터 안전모에 '이름표 달기' 추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이름 대신 "야" 또는 "인마"로 불려오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원이다.

26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안전모에 이름과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을 실시한다.

안전모 필수 착용 직종인 건설현장 등지에서 공용 안전모를 사용해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되찾고, 더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빈자리를 메우면서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떠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2만 5626명이지만,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은 비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해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광주·전남지역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일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름 없는 외국인으로 간주돼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현장에서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인 "야"로 불리면 그나마 낫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름없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들은 존재 가치도 없고 그저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여겨지기 일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며 고충을 토로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노동자는 "일하다보면 내 이름이 아닌 '야'라고 불린다. 다른 동료들은 이름이 6글자 이상 넘어간다는 이유로 비속어로만 불려 정체성을 잃는 것 같다고 속상해 하곤 한다"고 말했다.

건설과 조선업 등 위험한 상황에도 자신을 부르는지 몰라 산업재해를 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게 센터의 전언이다. "야"라고 외치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

실제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241명(2019년)→258명(2020년)→259명(2021년)→256명(2022년)→289명(2023년)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이름없이 생활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멸시를 받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격적인 존중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센터는 내년도 활동계획으로 안전모에 '외국인노동자 이름표 달기' 사업 계획을 전남도에 올릴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던 안전모를 외국인 노동자들 각각에게 제공해 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무거나 집어서' 사용했던 그동안의 안전모와 달리 각자의 이름이 적힌 '개인 소유'의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 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타국에서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며 핍박과 멸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원한다"며 "안전모에 이름을 적고 이름을 불러줄 것을 당부하면 안전모 착용률도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사회서비스원, 돌봄관리사 처우 개선하라"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일제 폐지 반발

광주지역 돌봄관리사들이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전일제'(정규 노동시장 근무형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전일제를 폐지하는 것은 돌봄관리사들의 처우를 개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 사회서비스원은 60명의 직원 중 17명에 한해서 전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재정상의 이유로 내년부터 시급제로 전환을 선언했다"면서 "5년 전 출범과 동시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돌봄관리사를 채용당시 '차차 좋아 질것'이라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 5년간 150여명의 돌봄관리사 중 남은 인원은 60여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면서 "돌봄노동자들은 그동안 시급제로 일하며 서비스 시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을 기대하며 참아왔지만 다시 시간제 근무형태인 수가제로 돌아가면 광주지역 돌봄서비스는 퇴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돌봄관리사들은 시급제로 일하게 되면 고정된 서비스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 일할지 모른 채 대기해야 하고 겸직을 하게 돼 서비스에 전념 할수 없다"면서 "광주시가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면 돌봄 관리사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한다"고 호소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학생들 급식 대신 도시락 먹나
비정규직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급식과 돌봄 업무를 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6일 전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은 급식 대체식 제공, 단축 수업 등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도시락 등 간편식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이번 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12월 3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기본급 정상화 ▲임금 격차 문제 해소 ▲복리수생수당 동일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난 6월부터 임금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주 파업 선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연대회의는 파업한다면 전국에서 2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생물테러 대비 훈련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이 26일 광주시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진행됐다.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119특수대응단들의 개인보호구를 착탈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r

전남대 신문 창간 70년만에 발행 중단

편집위원 "제작 원칙 없이 타협점 못 찾아 발생"

전남대학교 교내 신문인 '전대신문'이 편집국 구성원 동의 없이 발행 중단되자 전대신문 출신 선배들이 발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대신문 44기부터 74기 선배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발행 중단은 주간교수·편집위원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대신문 창간 70년 이래 전무후무한 사태"라며 "주간·편집위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자들과 협조해 신문을 펴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54년 창간한 '전대신문'은 지난 18일 발행 예정이던 1688호를 내지 못했다.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이 '오후 6시 제작 마감'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인쇄소에 제작 중단을 통보한 데에 따른 것이다.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은 지난 1667호부터 마감 기한 제도를 편집국에 도입했으나 학생 기자단은 반대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기자단은 "그동안 주간교수와 편집위원은 지면 제작과 관련해 '금요일 오후 6시 제작 마감'이라는 원칙을 편집국에 일방적으로 통보·강요해 왔다"며 "시의성이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가 변경되거나 늦은 시간까지 기사 작성이 이뤄지는데, 이런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대신문 편집위원은 "그동안 전대신문 편집국은 원고마감, 제작시간 등에 대해 뚜렷한 원칙이 없이 운영돼 왔다"면서 "신문편집 등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이 없다보니 제작에 차질이 여러차례 빚어졌다. 최소한의 제작 원칙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